

배포 일시	2022. 10. 24.(월)		
담당 부서 <총괄>	도시재생사업기획단 신도시정비지원팀	책임자	팀 장 조성태 (044-201-4957)
		담당자	사무관 김수현(4958), 문영훈(4960), 임채현(4465) 주무관 이지태(4959), 민규원(4961), 최서윤(4466)
담당 부서	고양시 재정비관리과	책임자	과 장 황수연 (031-8075-3430)
		담당자	팀 장 이성실 (031-8075-3437)
	성남시 도시정비과	책임자	과 장 정상철 (031-729-3330)
		담당자	팀 장 배정선 (031-729-4871)
	부천시 재개발과	책임자	과 장 권오철 (032-625-3740)
		담당자	팀 장 정성근 (032-625-3741)
	안양시 도시정비과	책임자	과 장 최종원 (031-8045-2420)
		담당자	팀 장 김학운 (031-8045-5140)
군포시 주택정책과	책임자	과 장 서승식 (031-390-0237)	
	담당자	팀 장 배진운 (031-390-0955)	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, 5개 신도시별로 지정한다

1기 신도시 전체로 정비 확산을 촉진하는 첫 이정표
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 기준 제시, '24년 중 지자체가 지정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, 고양시(시장 이동환), 성남시(시장 신상진), 부천시(시장 조용익), 안양시(시장 최대호), 군포시(시장 하은호)는
- 「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방안 및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」을 논의하기 위한 「국토교통부장관·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」를 10월 24일(월)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.

1) 그간 추진경과

- 국토부는 지난 10월 11일 브리핑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'24년 중 「선도지구 지정계획」을 발표하였으며,
-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 지정방안 구체화를 위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협의를 진행해왔다.

○ 또한, 국토부 - 지자체 공동으로 10월 17~18일에 걸쳐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, 정비 추진현황 등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, 선도지구 지정 관련 주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였다.

- 주민설명회에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여부, 지정 기준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,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에게 선도지구 지정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.

□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협의와 주민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10.24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, 오늘 간담회에서 주요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.

2) 「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방안」

□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1기 신도시의 「선도지구 지정방안」을 논의하였다.

① (의의) 약 30만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, 대규모 이주수요 발생으로 주택시장 불안 및 주민의 주거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, 단계적·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국토부·지자체가 의견을 모았으며,

-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도 일부 구역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전체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한 다수의 사례*를 참고할 때, 마중물 성격의 선도지구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였다.

* 행정중심복합도시(세종시 첫마을), 여의도(시범아파트) 등

- 선도지구는 노후도, 주민불편,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으로,

-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의 모범사례이자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첫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.

② (지정내용)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지정될 예정이며, 지역 여건을 잘 아는 각 지자체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직접 지정하기로 하였다.

- ①주민 참여도, ②노후도 및 주민 불편, ③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하고,

- 연구용역 및 지자체·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토부가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(국토부 수립)을 통해 지정 기준을 제시하고, 지자체는 기준에 따라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.

③ (지정효과) 선도지구에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착수, 미래 기반시설 우선 설치,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될 계획이다.

- 우선, 선도지구 지정 시 신속한 후속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별 기간 단축을 위한 사항을 검토한다.

- 또한, 도시기능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(자율주행, UAM, MaaS Station - 미래형 모빌리티 환승센터)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·적용이 검토되며, 현재 각 지자체가 지원 중인 안전진단·컨설팅 비용 등도 선도지구의 경우,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검토된다.

□ 국토교통부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“국토부는 '23.2월 말의 예정인 특별법안, 수립 예정인 정비기본방침 등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의 근거, 기준 및 효과를 구체화할 예정”이라며,

○ “선도지구가 체계적·순차적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지역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안 및 기준 마련 초기 단계부터 각 지자체와 충실히 협의해 나갈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
3)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

□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(지자체 수립) 관련 용역을 '23년 1월까지(성남시는 '22.10월) 발주 완료할 계획이다.

○ 정비기본계획에는 각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,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, 노후도시 정비, 자족기능 강화 등의 방안도 포함된다.

- 오늘 간담회에서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별 총괄기획가의 위촉장 수여도 진행되었다.
 - 총괄기획가는 정부·지자체·주민간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자문, 주민 간담회 등 월 3회 이상 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한다.
 - * 각 지자체는 MP 지원팀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

- 평촌 신도시 총괄기획가인 이범현 교수는 5개 신도시 총괄기획가를 대표하여 “1기 신도시 정비는 일반적인 개발사업이 아니라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신 기성도시를 정비한다는 특수성이 큰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” 하다면서
 - “오늘부터 저뿐만 아니라 5개 신도시 총괄기획가 모두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정부와 지자체에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해 나갈 것”이라며 활동 포부를 밝혔다.

-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“국토부와 지자체가 1기 신도시별로 개최 (10.17~10.18일)한 주민설명회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으며, 수렴된 여러 의견들을 적극 검토할 것”이라며,
 - “오늘 간담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신도시 정비 추진계획을 논의한 만큼, 향후 국토부·지자체·총괄기획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해나가겠다.” 고 밝혔다.

◆ 10.17~18일 양일간 개최한 국토부 - 지자체 합동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의 주요 질의 및 답변내용 요약

1.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중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?

- '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'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
- 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며, 통상 '정비기본계획' 수립에도 2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
 -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동시에 병행하여 수립하기로 하여, 2년 내(24년 중) 수립할 예정으로,
 - 정부의 정비기본방침 수립으로 인한 기간 지연은 없음

2. 선도지구는 왜 지정하는 것인지?

-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 등을 위한 체계적·순차적 정비, 1기 신도시 정비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모범사례를 통한 이정표 제시 필요
 - 가장 빠른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을 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 → 1기 신도시 전체로 확산을 기대
-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 시에도 일부 구역을 우선하여 시행한 사례 다수 (세종시 첫마을, 여의도 시범아파트)

3. 선도지구 지정권자는 누구인지?

- 선도지구 지정은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지자체가 지정
 - 국토부는 연구용역, 지자체·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, 특별법에서 법적 근거 등을 제시
 - 각 지자체는 기준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'24년 중 선도지구 지정

4. 향후 총괄기획가 등을 통한 주민 소통방안은?

- 총괄기획가는 정기적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
 - 각 지자체는 지원팀을 구성하여 총괄기획가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
- 또한, 정부·지자체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노력을 병행 추진